여의도연구원

대학생기자단

탐사보도 콘테스트

수상작 모음집

임 금

"청년들이 희망하는
최저임금은 얼마이며,
그것의 기준 혹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 거

"청년들을 위한 주거정책,
본인의 주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평가는?"

교 육

"자사고 폐지에 관해
본인의 주변에서는
어떤 반응이며
본인의 평가는?"

목 차

여의도연구원장 축사 ····· 3p

청년정책센터장 축사 ····· 5p

탐사보도 콘테스트란? ····· 7p

1 Round - 임금 ····· 9p

2 Round - 주거 ····· 29p

3 Round - 교육 ····· 47p

여의도연구원 대학생 기자단 탐사보도 콘테스트 시상식 및 시사골든벨

“탐사보도는 계속 되어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여의도연구원장 김세연 의원입니다.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확장해 나가고 있는 여의도연구원에 대학생기자단으로 참여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반갑고 고맙습니다.

저희 여의도연구원은 대학생 여러분의 시각에서 바라본 사회 현실과 이를 타개할 정책제언이 현실정치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전달해주신 청년의 목소리와 기자단 활동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연구원과 당에 의미 있는 자산으로 이어 나갈 것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9월 한 달간 8명의 대학생기자단 여러분들께서는 심층적인 취재와 분석을 통한 탐사보도로써 모두가 말은 하지만, 와 닿지 않았던 임금, 주거, 교육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다양한 청년들의 문제를 현실감 있게 전달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여러분이 보여준 열정에 박수를 보내며 수상작 속에서 제시된 어젠다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청년의 목소리는 정치 깊숙이 파고들어 정치의 중심에서 제 목소리를 내야 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청년

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창의적으로 정치를 바꾸어 나가는지 보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탐사보도에서 꼭 필요한 열정과 집념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항상 샘 솟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여의도연구원 대학생기자단 탐사보도 콘테스트 및 시사골든벨' 개최를 축하하며 모두 원하시는 대로 성취하고 결실 맺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연구원 2부원장이자 청년정책센터장 박진호입니다.

지난 6월, 무더위 속에서 시작된 청년정책센터는 청년정책 개발, 청년 활동장 제공, 청년지도자 양성이라는 3개 목표를 필두로 청년이 행복한 세상, 청년이 이끄는 대한민국이라는 운영비전을 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러한 사업 중, 여의도연구원 대학생기자단을 발족하여 바로 다가올 미래세대인 현 대학생이 직접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2020년 총년은 물론이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다지는 기틀이 될 청년정책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기에 여의도연구원 대학생기자단은 단순히 기사를 써서 기자 체험을 해 보는 장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청년들 스스로 찾아 이를 정리해 제언함으로써 싱크탱크의 가장 중요한 눈이자 전초기지의 역할을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이끌어내고자 전략기획실에서 계획하고 진행했던 탐사보도 콘테스트는 수상내역을 떠나 그 가치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9월 한 달간 세 개의 주제를 담은 세 라운드를 통해 기자단원들은 본인 눈에 비춰진 현상을 가감 없이 전했습니다.

청년들에게 가장 민감한 주제인 최저임금에 대해, 미래에 대한 걱정인 주거문제, 본인들에게는 비록 과거이지만 앞으로 뒤따라 올 후배를 위한 교육- 자사고 폐지에 대한 견해까지, 기자단원들은 자신 주변을 탐사하고 정보를 긁어모아 하나의 완성된 기사와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기사와 영상들은 결코 헛되이 남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내온 생생한 정보와 상황인 만큼, 여의도연구원과 청년정책센터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소중한 설계도면의 한 획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의도연구원 대학생기자단 여러분, 그리고 영광의 수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더욱 날카롭고 질 좋은 탐사보도에 증진하심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여의도연구원 대학생기자단 탐사보도 콘테스트

어떤 대회였나요?

여의도연구원 대학생기자단을 대상으로 청년정책센터가 기획한 콘테스트입니다.
세 가지 주제에 대하여 대학생기자단원들이 바라본 사회 현실과 이를 타개할 기자단원만의 독특하고 질 좋은 정보와 정책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2019년 8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한 달에 걸쳐서 진행되었으며, 10일의 간격을 두고 세 가지 주제를 기준으로 세 번의 라운드를 진행했으며, 이에 맞춰 기자단원들이 자유롭게 탐사보도를 작성해 겨루었습니다.
세 가지 주제로는 임금, 주거, 교육이었으며, 각각의 주제에는 주제문구를 통해 기자단원들이 효율적으로 탐사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임금에서는 “청년들이 희망하는 최저임금은 얼마이며, 그 기준 혹은 이유는?”이라는 주제문구로 최저임금개선에 대하여 고민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주제인 주거에서는 “청년들의 주거정책, 본인의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평가는?”이라는 주제문구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이 주제의 기간이 명절 추석과 겹치게 되어 기자단원들에게 힘든 일정이 되기도 했지만, 친인척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더욱 생생한 정

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라운드 주제인 교육에서는 “자사고폐지, 본인의 주변에서는 어떤 반응이며, 본인의 평가는?”이라는 주제문구로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이미 대학생이 되었기에 크게 공감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바로 우리의 후배, 우리의 미래에 있을 후대에 조금이라도 더 좋은 교육환경을 물려주고자 고민하였습니다.
위의 세 가지 라운드 주제를 통해 기자단원들은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기획실 대표 E-mail주소로 자신이 만든 작품을 제출했습니다. 제출 방식에는 10분 이내의 동영상 혹은 5쪽 이내의 기사 원고를 제출했습니다.

제출된 작품들은 명확성, 가독성, 완성도, 결론도출, 활용성이라는 다섯 가지 심사기준으로 네 명의 심사위원을 통해 제출자의 이름과 신원을 모두 가린 상태, 블라인드 심사로 200점 만점({심사기준 당 10점 만점*5개 기준}*심사위원 4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심사위원에는 김인호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강호승 청년정책센터 콘텐츠개발실장이 직접 맡아 진행했으며, 공정성을 위해 이윤정 퓨쳐포럼 공동대표, 정원석 차세대브랜드위원회 위원장께서 함께하셨습니다.
날카롭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총 9명의 참가자가 최종 심사에 진출하였으며, 모든 주제에 참가했는가의 여부 및 각 주제 혹은 분야별 최고 고득점자를 상위부터 시상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상작은 본 책자로 엮어 기록하였습니다.
현역 대학생으로 이루어진 여의도연구원 대학생기자단의 생생한 이야기와 톡톡 튀는 제언을 볼 수 있는 멋진 콘테스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콘테스트를 시작으로 기자단원들은 한층 더 자신의 탐사보도 기술과 이를 전하는 능력을 증진함과 동시에 질 좋은 정보를 토대로 개성 있고 효율적인 정책제언을 연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여의도연구원 대학생기자단 여러분.

2019년 11월 11일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전략기획실

1 Round : 임금

"청년들이 희망하는
최저임금은 얼마이며,
그 기준 혹은
이유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편의점 알바, 정상인가요?

- 법적 최저임금은 올라도 편의점 알바노동자 최저임금은 요지부동...

- “편의점 최저시급은 다 그래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시한 2019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으로 전년 대비 10.9% 인상, 그리고 올해 8월 5일 고용노동부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인상된 시급 8,590원을 고시하였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한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할 시 179만 5,310원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급격히 오르는 최저임금에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 영세업자들은 전년 대비 10%나 오른 최저임금과 더불어 오르는 야간수당, 인건비에 부담을 느끼며 골머리를 앓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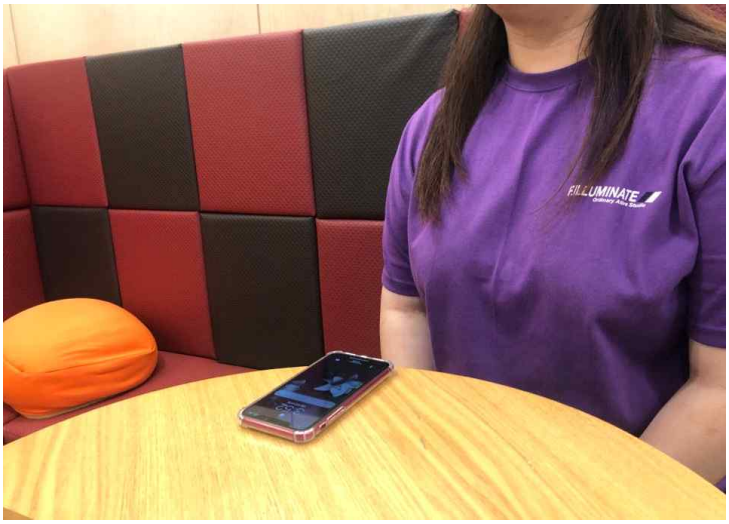
있다. 그 중,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아래 전편협)는 이처럼 최저임금이 더 오르게 된다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맞춰주기가 어려워져 범법자가 된다며 전국의 7만 개의 편의점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엄포를 놓은 바가 있다.

전편협은 지난해 7월 16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결정하였다. 전체회의에서 편의점 점주들은 월 1회 공동휴업, 올해부터 심야할증 도입, 종량제 봉투와 교통카드 충전 결제 시 높은 카드 수수료가 발생 시 카드결제 거부 방안을 논의 하였다. 또한 치솟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편의점 내에 호소문이나 플랜카드를 걸어 놓는 방안도 추진하였다. 노동자 고용에 관한 경우에는 15시간 일할 시에 주휴수당을 챙겨주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한 두 명의 노동자에서 여러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쪼개기 알바'가 다반사이다. 이에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알바 시간이 적어 월급의 변동이 나타나지 않아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면서 하는 이른바 '메뚜기 알바'도 나타나고 있다.

과연 최저임금 때문에 힘든가?
그렇다면 편의점 노동자들은 법적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가?

알바노동자들 사이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알바의 시작'이라고 한다.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학생 신분의 노동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겪는 업종이다. 여러 가지 이유 중 공통적으로 답하는 하나는 바로 '경력을 따로 필요로 하지 않아서'이다. 다른 업종인 카페 아르바이트, 서빙 아르바이트는 경력을 우대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알바공고 사이트에서도 경력자를 우대한다는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아르바이트의 첫 시작점에서의 편의점 알바 노동자들은 과연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였을까? 편의점은 지금처럼 최저시금이 급격하게 오르기 전에도 법적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업장이다. 알바노조가 2017년 10월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노동자 4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로는 응답자의 55%, 즉 절반 이상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일을 하였다. 또한 92%의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해주는 편의점은 극히 드물었다.



9개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던 안모(23)씨와의 인터뷰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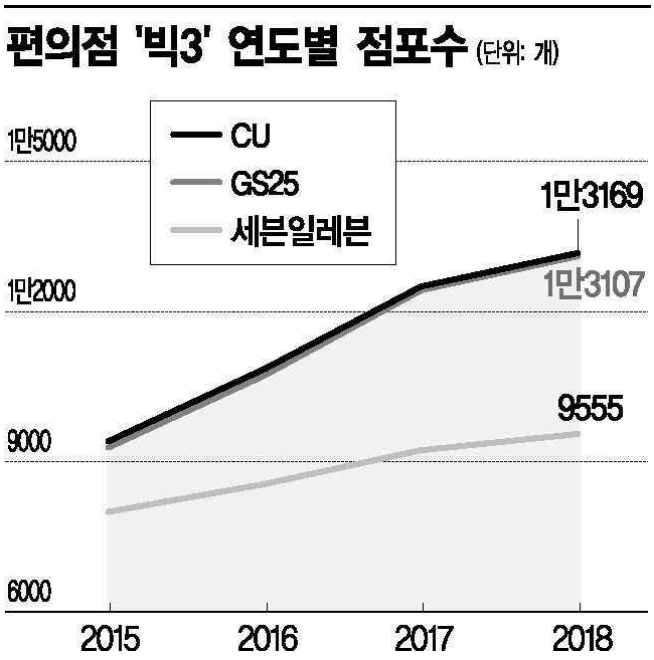
2017년 당시 대구에서 편의점 알바노동자였던 안모(23)씨는 법적 최저시급 6,470원에 미치지 못하는 5,500원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한다. 구인광고에 최저시급은 어떻게 공시되어 있었느냐는 질문에 '협의 후 조정'이라고 답하였다. 면접을 봤을 때 최저시급 언급에 대해서는 "편의점 점주님이 최저시급이 너무 높고, 동네에 손님이 부족해 최저를 다 줄 수 없다. 몇 개월 근무를 하고 나면 500원 인상을 해주겠다."라며 최저시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라는 생각을 하였음에도 신고하지 못했던 이유는 "신고를 할 시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하였다. 이에 덧붙여서 편의점 가맹점주가 하는 말은"이 지역 고용주들은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알바생의 정보를 공유한다."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반면, 2018년 대구에서 5개월 가량 근무했던 편의점 알바노동자 최모(22)씨는 "구인광고에는 법적 최저시급 7,530원이라 명시되어 있었지만 실제 최저시급은 6500원이었다."라며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다르게 적혀있던 최저시급에 대해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자 편의점 가맹점주는 "편의점 최저시급은 다 그래요.. 여기만 아니라.."라며 오히려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먹이사슬의 끝은 힘 없는 알바 노동자

‘갑’의 횡포의 피해는 고스란히 알바노동자에게..

사실, ‘편의점 가맹점주가 힘들어진다.’라는 것은 단순히 치솟는 최저임금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4대 편의점 본사 및 가맹점의 현황에 따르면 편의점 본사의 매출액은 2008년 6조원 대에서 2016년 20조 4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의 편의점 평균 매출은 5억 4000만원에서 6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은 4.2% 정도에 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나날이 증가하는 최저임금 뿐만 아니라 임대료 상승, 그리고 무차별적인 가맹점확대로 인해 언제 편의점이 사라질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노심초사하고 있다. 지난해 9월 18일 편의점 점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에서 가맹점주들은 “편의점 문제의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무차별적인 점포 확대 등 비합리적인 사업운영 체계에 있다”라고 답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에 기존 가맹점으로부터 도보거리 250m이내 출점을 금지하는 거리 제한을 두었지만 이 제한은 같은 브랜드의 점포에서만 적용이 된다. 그러

므로 다른 브랜드의 입점이 들어서는 것은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듯이 한 골목 안에 다른 브랜드의 편의점들이 줄지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현재는 국내에 3만여 개가 넘는 편의점이 들어서 있다.

두 번째로는 본사와 편의점 가맹점과의 수익 분배의 문제이다. 보통 편의점들은 본사가 매출총이익에서 35% 정도를 가져간다고 한다. 35%의 금액을 본사에 보내주고 알바 노동자들의 인건비, 임대료, 전기세와 같은 관리비가 빠져나가고 나면 실은 점주의 손에 있는 돈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래서 편의점 점주들은 본사에 항의할 수 없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인 알바들의 노동시간을 쪼개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적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최저임금을 놓고 싸워야 하는 것은 알바노동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먹이사슬의 최하위인 노동자들이 아닌 옳지 않은 불공정한 계약을 하고 있는 본사에 대해 칼날을 겨누어야 한다. 편의점 업계의 이러한 해결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 편의점협회는 정부와 가맹사업본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편의점 점주들의 매출 대비 영업이익은 상승할 것이며 따라 알바노동자들에게 지급되어지는 인건비 또한 상승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최저임금에 가까운 금액을 지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품을 수 있지 않을까.

앞서 편의점 알바노동자인 최모(22)양은 희망하는 최저임금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희망하는 특정 금액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러나 법적 최저임금만은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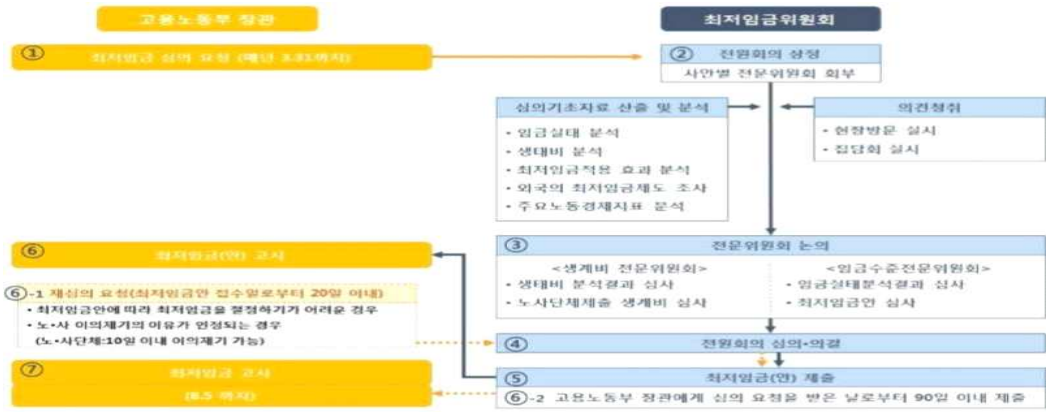
2019. 9. 7.

여의도연구원 대학생기자단 신윤미

최저시급의 급격한 인상 독인가 약인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 34조와 제 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근거를 두고 있으나, 그 당시 경제 상황이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에 힘들다는 판단으로 이 규정이 시행되지 않았다.

[헌법] 제32조 제1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 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의 근거 규정에 의거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이 제정, 공포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심의절차 및 결정 과정은 아래 그림을 따른다.



이렇게 산정된 최저시급은 원칙적으로 보자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지역별, 업종별로 노동력이 다르고 고용형태 또한 세분화되어 있어서 근로자의 능력 차이에 따라 차등 지급하지 않고 모든 근로 노동자에게 획일적으로 동일한 최저임금을 제공한다면 오히려 능력별 취약계층의 근로 노동자에게 고용기회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발생 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감안하기 위해 대다수 국가에서는 차등 최저임금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 최저임금으로 운용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을 매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노동 근로자 측은 너무 낮다고 주장하는 반면 기업 측면에서 지불 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는 범위의 금액이라는 주장을 펼쳐 항상 상 반된 상황을 초래한다. 이는 노동 근로자는 가능한 많은 임금을 받길

원하고 기업 측에서는 적 은 임금으로 고용하기를 원하는 점도 있겠지만 다른 측면으로는 최저임금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라는 의견도 있다.

여기서 불투명이란 근로자가 얼마를 받는지, CEO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의 총액은 얼마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의 산정 입금 범위가 다른 나라에 비교해 너무 좁기 때문인데 임금총액과 인건비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최저임금은 모든 기업체 노동자 통상임금 평균금액의 70%내외에 해당하는 임금액이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이 임금총액과 같은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최저임금제의 도입으로 인해 저임금수준의 노동자를 보호하고, 복지국가의 선행조건을 만족시키게 된 것은 사회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으며,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면의 기여 그 이면에는 업종 간의 특수성, 지역 간 임금 격차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모순점도 표출되었다. 최저임금제 도입을 통해 어려움을 겪게 된 중소기업들이 내 세우는 문제점이 많아지고 있다.

현재 정권의 시작 전부터 많은 부분이 관심을 끌었어도 대학생으로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최저시급 인상 공약이다. 처음 최저시급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5000원도 안되던 최저시급은 공약으로나마 만원이라는 체감을 접했을 때는 예전과 비교해서 물가가 올랐으니까 그에 발맞춰 최저시급이 오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란 생각과 아직은 최저시급을 주는 것보단 받아야하는 입장에서 또한 후에 월급을 받게 되는 상황의 월급 산정 방식 또한 최저시급을 기초로 계산한다는 것을 알고 급격히 올라버린 최근의 인상 폭이 반가웠다.

하지만 이러한 상승을 반가워만 할 수는 없는데 아래 그래프로 살펴보자면 다음 정리된 현황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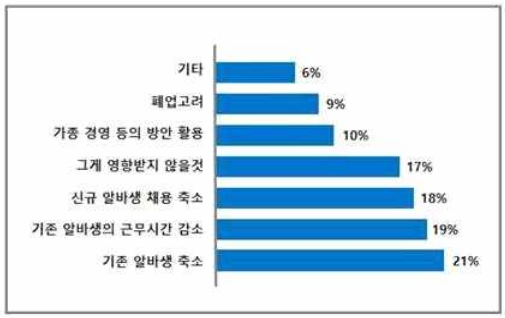
<표1-1> 우리나라 최저임금 현황

(단위 : 원, %)

적용년도	시간급	일급 (8시간 기준)	월급 (209시간 기준)	인상액 (인상백분율)
'18.1.1 ~'18.12.31	7,530	60,240	1,573,770	1,060(16.4)
'17.1.1 ~'17.12.31	6,470	51,760	1,352,230	440(7.3)
'16.1.1 ~'16.12.31	6,030	48,240	1,260,270	450(8.1)
'15.1.1 ~'15.12.31	5,580	44,640	1,166,220	370(7.1)
'14.1.1 ~ '14.12.31	5,210	41,680	1,088,890	350(7.2)
'13.1.1 ~'13.12.31	4,860	38,880	1,015,740	280(6.1)
'12.1.1 ~'12.12.31	4,580	36,640	957,220	260(6.0)
'11.1.1 ~'11.12.31	4,320	34,560	902,880	210(5.1)
'10.1.1 ~'10.12.31	4,110	32,880	858,990	110(2.75)
'09.1.1 ~'09.12.31	4,000	32,000	836,000	230(6.1)
'08.1.1 ~'08.12.31	3,770	30,160	787,930	290(8.3)
'07.1.1 ~'07.12.31	3,480	27,840	727,320	380(12.3)
'05.9 ~ '06.12	3,100	24,800	647,900	260(9.2)
'04.9 ~ '05.8	2,840	22,720	593,560	330(13.1)
'03.9 ~ '04.8	2,510	20,080	524,590	235(10.3)
'02.9 ~ '03.8	2,275	18,200	475,475	175(8.3)
'01.9 ~ '02.8	2,100	16,800	438,900	235(12.6)
'00.9 ~ '01.8	1,865	14,920	389,785	265(16.6)
'99.9 ~ '00.8	1,600	12,800	334,400	75(4.9)
'98.9 ~ '99.8	1,525	12,200	318,725	40(2.7)
'97.9 ~ '98.8	1,485	11,880	310,365	85(6.1)
'96.9 ~ '97.8	1,400	11,200	292,600	125(9.8)
'95.9 ~ '96.8	1,275	10,200	266,475	105(8.97)
'94.9 ~ '95.8	1,170	9,360	244,530	85(7.8)
'94.(1~8)	1,085	8,680	226,765	80(7.96)
'93	1,005	8,040	210,045	80(8.6)
'92	925	7,400	193,325	105(12.8)
'91	820	6,560	171,380	130(18.8)
'90	690	5,520	144,210	90(15.0)
'89	600	4,800	125,400	1그룹137.5 (29.7)
				2그룹112.5 (23.7)
'88	1그룹[10] 462.50	3,700	96,662.50	
	2그룹[11] 487.50	3,900	101,887.50	

참조 : 최저임금 위원회(2018) http://www.minimumwage.go.kr/

최저임금 인상 추이(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자료 : 인크루트(2018)

2018년 인상 폭은 최저시급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 89년에 적용되어 올해로 30년 중 눈에 띄는 변화이다. 인상 폭이 가장 낮았던 98년에는 IMF라는 직격탄으로 2.7 의 상승을 기록하였다.

높은 인상률로는 올해가 역대 2번째로 큰 인상 폭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처음 개념이 도입된 89년 이후 다음 해인 90년 91년 각각 15 와 18.8 의 인상 폭은 당시의 경제 성장률과 처음 도입 때의 미흡한 최저임금 산정 방식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여졌을지라도 현재의 경제 성장률 대비 현재의 최저시급 인상률은 급격하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에 반증이라도 하듯 시장에서 최저시급과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아르바이트 시장에서는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주휴수당 교통비 야간수당 등 최저시급 이외에도 지급해야 할 비용이 많은 입장에 있다. 법적으로 산정된 기준인 만큼 지켜야 하는 압박 속에 택한 방법은 인원 감축이다.

CGV의 경우 이전에 5명이 진행하던 오픈 시간은 3명으로 줄어들었으며 가장 바쁜 시 간을 제외한 오전과 야간의 경우는 경력직 위주의 필요한 인원만이 배치되었다.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찾기가 어려워진 만큼 들어간다 하더라도 법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시간만큼만 고용하여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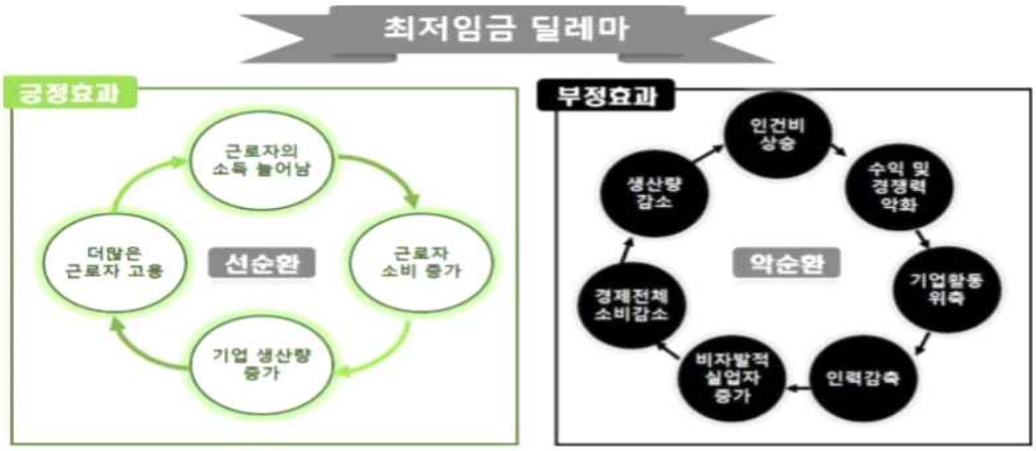
소상공인의 경우는 더욱 열악하여 일자리가 줄어들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힘들어졌거나 각종 수당이나 월급제로 인해 최저시급보다 낮은 조건으로 채용하려는 등 다양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었으며 새로운 일자리 또한 인원 감축이나 인상 폭만큼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란 쉽지 않은 형태로 변해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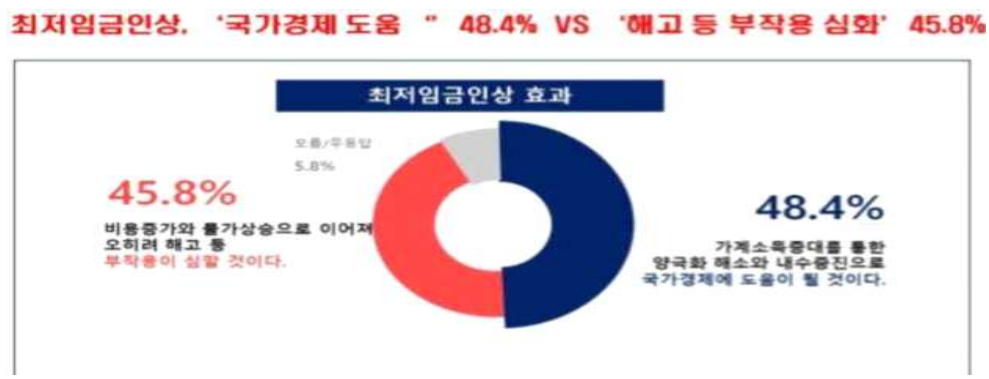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려던 분수효과란 최저시급의 인상을 통해 노동자의 근로소득을 늘려 소비를 증가를 통한 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더 많은 고용을 추구하게 된다는 소득 주도형 분수효과를 계획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간과해서 빠진 부분이

근로자의 소득을 어느 정도 만큼 늘려야 사회적 충격 없이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인가이다.

이번 정부 공약이었던 시급 만 원 달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충격에 조사나 연구는 없이 선전효과에서의 공약의 무리한 실천은 경제침체로 이어지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현재의 경제침체가 최저시급의 급격한 인상 때문은 아니지만, 내수경제의 성장 부진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선 현재의 시장에서 창출되는 고용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동자의 교육과 시장성의 통 한 생산력 증대를 통해 기업의 선순환적 수익 증대라는 시간과 사회적 합의 후에 시급인상으로 이어졌다면 시장에서의 충격 또한 완화되어 고용자와 고용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시급의 인상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2019. 9. 8.

여의도연구원 대학생기자단 이현종

논란의 최저임금 인상, 반으로 나뉘는 의견

- **음식점주 “알바생들을 우리 자식처럼 생각한다면은 최저시급 올리는 거는 인정해야지.”**
- **마트 점주 “여기서 오래 했는데 장사를 접을지도 모르겠어요. 워낙 불경기인데…”**

지난 7월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여러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20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최저임금에 대해 20대 위주로 대학생기자단은 9월 6일부터 7일까지 총 91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절반 이상(53.3%)이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설문대상은 □20대 초반(20~23세)(50.5%) □20대 중반(24~26세)(38.5%) □20대 후반(27~29세)(9.9%)으로 진행하였다.

설문결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냐는 것에 대해 □예(85.7%) □아니오(14.3%) 순으로 답했다. 2019년 아르바이트 구직경험에 대에는 □예(65.9%) □아니요(34.1%) 순으로 답했다.

이들은 아르바이트 구직 활동 중 가장 어려웠던 점은 □주 1~2회 혹은 1~3시간 짜리 ‘시간쪼개기’ 아르바이트 심화(36.7%) □기업의 아르바이트 구직 저조(31.7%) □아르바이트 구직자 간의 경쟁률 심화(28.3%) 순으로 답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만족도로 최저임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에 대해 □적당하다(66.7%) □너무 많다(16.7%) □너무 적다(15.4%) 순으로 답했다.

최저임금의 적정선으로 적정선이 어느 정도라는 질문에 대해 □현재(8350원 ~9000원)(30.7%) □현재(8350원)(20.9%) □9000원~10000원(24.2%) 순으로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견으로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다(53.8%) □부정적이다(46.2%) 순으로 답했다.

이들 중 긍정적이다 라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 □물가 상승 때문(63.3%) □경기 안정에 대한 기대 때문(20.4%) □아르바이트 업무 강도가 높기 때문(14.3%) 순으로 답했다.

부정적이다 라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는 □경기 침체 이유 때문(32.7%) □대량 해고의 위협 등 고용 불안정 우려 때문(30.6%) □인건비 급상승 때문(24.5%) 순으로 답했다.

고용주들의 반응 또한 나뉘었다. 수원 인계동에서 사무실 운영하고 있는 강씨(5*세)는 30년 동안 사무실을 운영해왔다. 강씨는 “내 수입을 줄이더라도 줄 것은 다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일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다들 책임감을 갖고 일하게 되니까.”라고 답했다.

수원 인계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최씨(4*세)는 “알바생들을 우리 자식처럼 생각한다면은 최저시급 올리는 거는 인정해야지. 이번에 교통비도 오른다며? 근데 내년 최저시급이 200원 오른댔나? 어떻게 살아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자식들도 이런 환경에서 살아야 먹고 살거 아니에요.”라며 최저시급이 인상된 결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에 반해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고용주들도 있었다.

수원 매탄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이씨(4*세), “월급이랑 같이 물가도 오르니까 가게 유지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생기죠. 이렇게 인건비가 높아지니까, 미용용품들 가격도 같이 오르더라구요.”

수원 우만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씨(5*세), “아무래도 매출에 비해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게 된 게 아깝기는 해요. 그래서 알바를 잘 안 쓰려고 해요. ‘최저 시급 받는건 일 최저로 하란 뜻이다’, 이런 말 하는 애도 봤어요. 다 챙겨 받으려면 알바 못 구할수도 있어요. 나도 살아야지. 자영업이 살아야 알바도 있지.”

수원 인계동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김씨(3*세), “알바 시급 챙겨주는거, 주휴수당 주는거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알바를 하루에 2시간만 쓰기로 했어요. 정부 지원 같은 게 있었음 좋겠어요. 우리는 프랜차이즈인데 임대료 내지, 가맹금 내지, 로열티도 있고. 차라리 이런 프랜차이즈 기업에다가 이런걸 좀 낮추라고 하면은 최저시급 챙겨주면서 알바를 좀 고용할 수가 있을텐데. 이거는 완전 을들의 싸움이에요. 갑들은 계속 돈 버는데. 똑같이.”

수원 원천동에서 야채가게를 운영하는 박씨(6*세), “내가 포터를 타고 야채를 옮기는데요. 농부들도 좀 힘들 거 같지만서도 갖다 파는 나도 너무 힘들어. 잠깐 청년들 썼다가 시급 다 쳐주면 남는 게 없어요. 당근, 양파 팔아서 얼마 남겠어요. 그런데 최저시급은 오르지...”

수원 매탄동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이씨(6*세), ”임대료 내기도 벅차서 알바를 못써

요. 예전에는 아는 집 자식들 데려다 알바도 시켜주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게 안 되니까. 물가 오르니까 물건 떼오는 것도 비싸지고 임대료도 오르고… 여기서 오래 했는데 장사를 접을지도 모르겠어요. 워낙 불경기인데…”라며 인터뷰를 진행한 7명의 고용주 중에 5명이 최저시급의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2019. 9. 8.

여의도연구원 대학생기자단 강소진 최보영 김하은

‘진짜’ 청년들의 최저임금

- ‘진찌’ 청년들에게 ‘최저임금’이란?

현재 청년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관심을 가지게 하는 사회 이슈라고 하면 최저임금을 빼놓을 수 없다. 최저임금에 따라 청년들은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가 피부로 와 닿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주요 정당은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명목으로 청년 단체, 청년 위원회 등을 만들어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막상 그 단체의 구성원들을 알아보면 진짜 청년들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당헌당규에 따라 청년의 기준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총 4명의 실제 청년들을 만나 의견을 들어보았다. 첫 번째로 만난 청년은 현재 국내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22세 ‘윤한별’씨였다. 윤한별 씨는 최저임금은 현상유지(8,350원) 되어야 한다고 뜻을 밝혔다. 다음은 윤한별 씨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기　자: 안녕하세요 한별씨, 최저임금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응답자: 네 일단 만약 가능하다면 저는 최저임금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기　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응답자: 2018년 기준 8350원의 최저임금이 정해졌을 때도 자영업자들이 알바생이나 직원 고용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고충을 겪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은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또 인상한다면 서민을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진정한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 의미이니 편 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응답자: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평범한 직장인들 월급 받으면서 일하다가 퇴직하고 나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요식업입니다. 현재 자영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요식업이구요. 요식업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고깃집에서 알바를 하다가 현재 학업 때문에 잠깐

그만둔 상태인데 안 그래도 부족한 돈에 고용하는 데 있어서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식업 사장들 입장에서 그나마 진입장벽이 낮은 요식업에게 또 하나의 문턱을 만듦으로써, 결국에 피해를 보는 건 서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들은 최저임금 조금 오른다고 걱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저임금에 대해 현상 유지가 가장 적당하다고 봅니다.

기자: 네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고, 일본에서 취업을 계획하고 있는 22세 이태규 씨에게 의견을 여쭤보았다. 이태규 씨는 21세까지 우리나라에서 유학을 준비하며 거주하다가 올해 일본으로 떠났다. 이태규 씨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볼 때 최저임금을 낮추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태규 씨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기 자: 안녕하세요 태규씨, 최저임금은 얼마가 적당한지와 그 이유에 대해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응답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최저임금을 7500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소비가 줄고, 자영업자들은 더더욱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현 정부의 공약대로 1만 원까지 인상한다면, 자영업자들의 고용 기피 현상은 더욱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용은 줄고 고용을 해야 임금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는데 소비를 위한 소비촉진제가 없으니 전체적으로 자본이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 자: 결국 대기업의 횡포나 재벌 독과점과 관련없이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응답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고용이 너무 잘 되어서 면접만 보면 합격한다는 말이 나오는 수준인데,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경제수준에 발맞추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포퓰리즘(populism :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행태) 정책을 통한 표심 얻기에만 급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 자: 네 알겠습니다. 결국 1만원 최저임금은 물론이고 오히려 최저임금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었군요.

세 번째로는 현재 우리나라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22세 박수민 씨를 인터뷰 하였다. 수민 씨는 성인이 되자마자 시작한 아르바이트로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8350원 이전 수준인 7530원일 때가 가장 적당한 최저임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수민 씨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기　자: 안녕하세요 수민씨, 최저임금으로 얼마가 적당할지 또한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응답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최저임금이 이전 수준인 7530원이 가장 적당한 최저임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　자: 그 이유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응답자: 일단 아르바이트생들이 힘들어지죠. 고용주들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당연히 고용량을 줄일테고, 그에 따라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은 해야 할 일의 양이 훨씬 늘어나게 되요. 예를 들어서 주방에서 5명이 하던 일을 3명이 해야 하게 되는거죠. 그럼 당연히 노동의 강도는 늘어나요.

기　자: 네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응답자: 그럼요, 솔직히 아르바이트를 몸소 경험하는 저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해달라고 한적도 없는데 최저임금을 나라에서 올려놓고, 사장님들은 '너희 최저임금 올랐으니까 당연히 음식값도 올라야지'와 같은 자세로 나오시니까 좀 그렇죠. 솔직히 저희가 알바를 평생 할 것도 아니고, 학생 시절에 몇 년 하는건데 물가가 계속 오르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오르는 것을 원치는 않아요.

기　자: 네 솔직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익명을 요청한 한 대학생을 인터뷰하였다. 그는 최저임금 1만원이 적당하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그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기 자: 안녕하세요 xxx씨, 제가 여쭤볼 문제는 '최저임금'에 대해 어느 정도가 적당하고 그 이유입니다.

응답자: 네 알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저는 지금도 모자라다고 생각해요. 사실 아르바이트생들 입장에서는 많이 줄수록

좋은 것이 최저임금이죠. 물론 경쟁률이 더 세지고 아르바이트 자리가 줄어들겠지만 그건 본인들의 능력이니까요. 사실 최저임금 1만원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생각이 없고 이기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 청년들의 상황에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 까지 바라는 건 사치라고 생각해요.

기 자: 네 간단하고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처럼 4명의 청년 중 3명은 최저임금에 관해 현상유지를 주장하거나 오히려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나머지 한명은 최저임금 1만원이 가장 바람직한 목표라고 답했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통계 조사를 하고,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권이 들어서고, 노동자들의 파업이 밥 먹듯이 일어나는 이 상황에서,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청년들의 입장을 너무나도 묵살하고 그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에 대한 정책을 펴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한다. 4명의 청년이 내놓은 입장으로는 모든 대한민국의 청년을 대변할 수 없는 게 당연한 한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 명 한 명의 구체적인 입장과 그들이 지금 아르바이트를 몸소 겪는, 진정한 청년이라는 것에 있어서 이 기사가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2019. 9. 8.

여의도연구원 대학생기자단 나찬솔

최저임금에 대하여

- 최저임금 관련 대학가 인터뷰 영상이다.
- 영상 링크 주소는 https://youtu.be/zluPU9dvUGg 이다.

2019. 9. 8.

여의도연구원 대학생기자단 김경민

최저임금에 대한 인터뷰

- 최저임금에 대한 두 여학생의 무편집 인터뷰 영상이다.
- 영상 링크 주소는 https://youtu.be/RBBETBLFKDY 이다.
- 두 번째 영상 링크 주소는 https://youtu.be/WlA60ATY3Sk 이다.

2019. 9. 8.

여의도연구원 대학생기자단 성창헌

2 Round : 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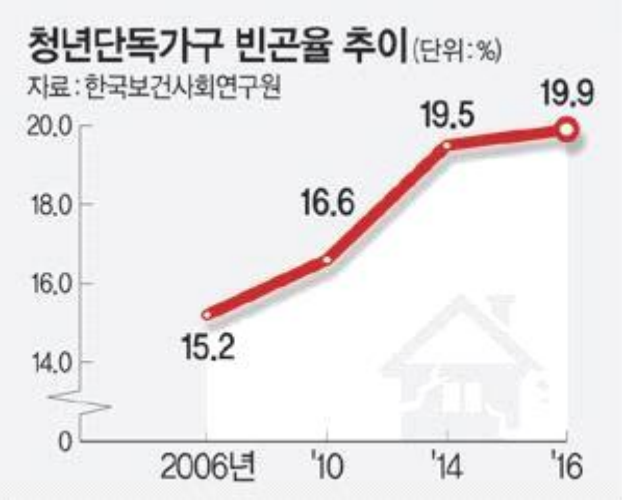
“청년들이 주거정책, 본인의 주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평가는?”

대구시 북구 행복주택, 누구를 위한 '행복'일까

- 행복주택의 의미와는 사뭇 다른 현실..
결코 반갑지 않은 지역 주민들의 반응에 사업 착공 전부터 차질 생겨..

'민달팽이 세대'란 '주거가 불확실한 청년 세대'를 일컫는 말이다. 집을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상황을 집이 없는 민달팽이에 빗대어 생겨난 신조어다. 청년들의 주거 빈곤은 오늘날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턱없이 높아지는 임대료에, 그나마 겨우 구할 수 있는 반지하·옥탑방· 고시텔의 합성어인 '지옥고'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

1인 가구가 520만 시대를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청년 주거 빈곤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작년 6월 2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빈곤의 다차원적 특성분석과 정책대응 방안(김문길, 김태완, 임완섭 등)'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가구의 2006~2016년 빈곤율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가구 빈곤율 분석 결과

혼자 사는 청년 가구 5가구 중에 1가구는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팀이 가구 유형별로 청년단독가구, 청년부부가구, 청년부부+자녀가구, 부모+청년가구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청년단독가구의 빈곤율은 2006년 15.2에서 2016년 19.9로 늘었다.

높아지는 임대료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청년들은 다시 부모에게 돌아가 의

존해서 사는 ‘리터루족’이 되어가고 있다. 리터루족은 돌아가다는 의미인 ‘리턴(return)과 부모에게 의존하여 사는 ’캥거루족‘을 합친 신조어다.

나날이 증가는 청년 주거빈곤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워져 정부에서는 청년 주거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을 등장시키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LH 대학생 전세임대’, ‘청년전세 임대’ 뒤이어 ‘행복주택’이라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하였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출처 행복주택 홈페이지)

청년 행복주택 사업의 의미는 대학생 등 청년(19~39세)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본인의 직장에 가까운 국·공유지에 청년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기준 청년 행복주택 사업의 입주자격은 본인 또는 부모합산소득 100 이하. 자산 0.74억 원~2.44억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등으로 이러한 것들을 충족하기만 한다면 자격이 주어진다. 대학생에게는 시세 68의 임대료를, 사회초년생에게는 시세 72 의 임대료를,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는 시세 80의 임대료만을 책임지게 한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이러한 청년 주거정책은 얼마나 선한 정책인가.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행복주택, 현실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입니다.”

이는 행복주택의 홍보 문구이다. 과연 행복 주택은 문구에 적힌 그대로 되어있을까. 현재 대구광역시 학교 근처에는 행복주택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2013년부터 기획되던 행복주택은 도대체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

구분	공급호수	대학생 등 청년(80%)	취약계층(20%)	시행	비고	
					사업승인	입주
계	742	612	130			
북구 읍내동	252	201	51	LH	'16. 6.	'21.
서구 비산	40	32	8	LH	'16.12.	'19.
동대구로 창업지원주택	100	100(청년창업인)		LH	'17.12.	'21
수성알파시티	156	124	32	도시공사	'17.11.	'20
북구 복현	194	155	39	도시공사	추진 중	'23

대구광역시 행복주택 사업내용 (출처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또한, 대구광역시 다수의 행복주택은 사업승인은 났지만 입주 시기가 많이 밀려 청년을 위한 주 거정책이 사실상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 도대체 사업승인 이후와 입주 시기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북구 읍내동이다. 읍내동은 가장 많은 행복주택 공급호수를 보유하고 있지만 다섯 지역 중 사업승인과 입주 시기 사이에 공백이 제일 긴 지역이기도 하다.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의 행복주택 사업 부재의 이유는 무엇일까

대구시 북구 읍내동, 이곳 4천 250㎡의 부지에는 지하 3층, 지상 10 규모의 행복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애초 2019년 3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착공이 미뤄지면서 준공은 2021년 이후가 될 예정이다. 읍내동의 사업승인과 입주 시기 사이의 공백이 길었던 것은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부지의 지역 주민들과의 불화가 사업 추진에 가장 큰 문제였다.

한국주택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 북구 읍내동 행복주택 사업의부지모습 (출처 네이버뉴스)

지역 주민들의 반대 뿐만 아니라 불교계에서도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읍내동 부지 근처에는 조계종 사찰 화성사가 위치하고 있으며 화성사 신도회 일동은 행복주택 부지에 플랜카드를 거는 등 18층 고층아파트의 건립은 일조권 침해, 분진 소음, 교통체증 유발, 주민여론을 수렴치 않는다며 결사반대를 하고 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복주택 건립을 강행 할 경우에는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한 바가 있다.

지역 주민들은 아이들의 등굣길이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LH측에 주 출입구 변경을 요구하였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LH측은 지구단위계획상 출입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기존 2.5m이던 인도를 7m, 왕복 2차로인 차도의 폭도 7m에서 9m로 넓혔다. 지상 1~6층을 주차장으로 만들려던 계획안도 주민 요구에 의해 지하 1~3층으로 변경하는 등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불만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을 보이고있다. 또한, 인근 사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처음 계획했던 행복주택의 층수인 18층, 400가구 규모를 252가구로 줄였지만 불교계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다음은 입주민들의 문제이다. 본래 행복주택은 위치는 학교나 직장이 가까운 곳,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이며 실제로 건립 지역은 과연 그들의 일터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을까. 북구 읍내동의 위치는 금호강의 위쪽, 즉 대구의 외곽에 위치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대중교통 이용은 편리한 곳일까. 대학교를 기준으로 거리를 설정해보기로 하였다.

대구시 북구 읍내동 행복주택과 성서 계명대학교의 대중교통 이용 시 거리

대학생 청년이 북구 읍내동 행복주택 거주 시, 성서 계명대학교를 재학 중이라면 대중교통으로 는 가장 빠른 경로 이용 시 약 1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거주지에서 나와 버스 정류장까지 약 9분, 급행버스를 타고 13개 정류장 이동 시 약 37분, 버스정류장에서 다시 대학교까지 14분이 소요된다. 버스의 배차간격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아마 소요 시간은 1시간을 넘어갈 것이라 예상된다.

아침 1교시 9시 수업이 있는 대학생이라면 늦어도 7시에는 일어나 준비를 해야 도착을 할 것이다. 통학 시간만 해도 1시간, 집에 가는 시간이 출퇴근 시간과 겹친다면 가는 길이 황천길로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7일 중 5일 학교를 가고 급행버스 요금이 1,650원으로 계산을 한다면 하루에 3,300원, 일주일에 16,500원, 한 달에 66,000원이 된다.

훨씬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행복 주택이지만 오히려 학교와 또는 직장과 너무 먼 거리인 외곽에 있어 학교까지 가는 차비가 더 든다는 우려도 생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년들은 행복주택에 살면서 어떻게 마냥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

차라리 홍보 문구가 "치솟는 임대료, 줄어들지 않는 생활비에 부담을 느끼는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에게 짐을 덜어주기 위한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입니다."라는 언급이었다면, 이전의 홍보 문구가 가져다줬던 큰 기대만큼 실망과 좌

절이 큰 상황이 다소 적지 않았을까.

진정한 행복을 위해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를 말한다. 현재 상황에서 ‘행복주택’에서의 행복은 사전적 의미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단어에 가깝다.

홍보 문구에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위치 해 있다는 언급이 되어있다면 행복주택의 교통편은 편리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곳에 위치한다면 교통비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추가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의 공존을 위해서도 힘써야 한다.

청년 행복주택 건설을 시행하는 업체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반발을 줄일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거나 이것이 잘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청년의 자립적이고 안정적인 주거정책만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거주하게 될 행복주택의 지역 인근 주민과도 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청년들의 근본적인 문제, 시행 업체와 지역주민의 갈등을 해소한다면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까지도 진정한 의미인 ‘행복주택’에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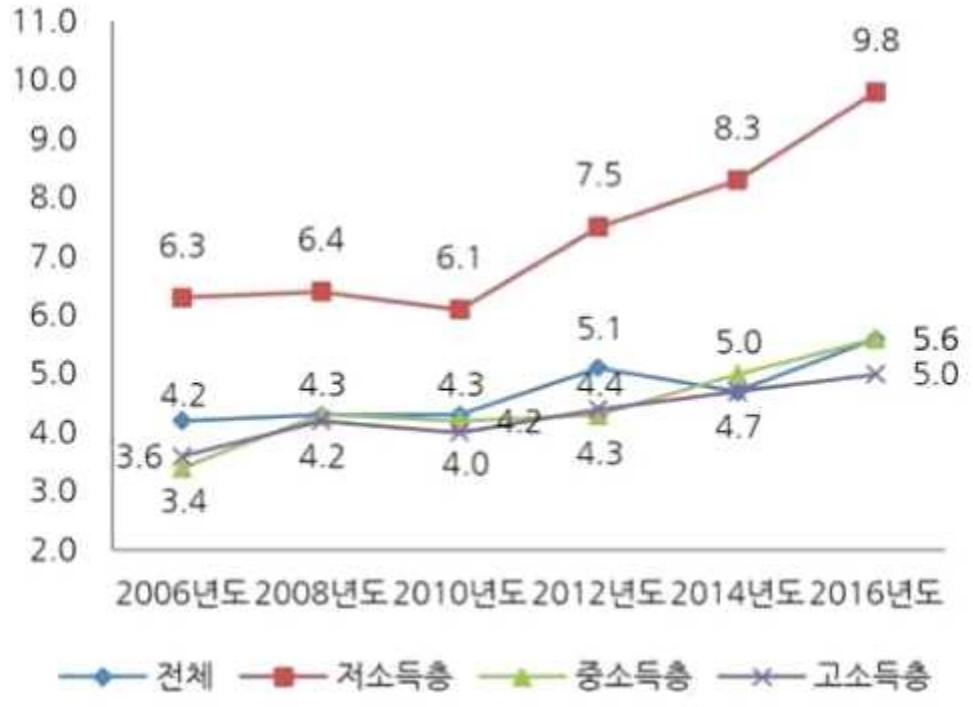
2019. 9. 18.

여의도연구원 대학생기자단 신윤미

내 집 마련의 꿈

-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5.6년 걸리는 내 집 마련
- 색다른 방법으로 내 집 장만하는 사람들

대학교 졸업 후 취업이라는 장벽 뒤에 기다리고 있는 내 집 장만하기이다. 최근 국토 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내 집을 장만하기 위해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아야 하는 기간이 평균 5.6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소득별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 추이.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집값이 점차 상승하면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주택 소유비율 차이가 벌어지는 등 주거 양극 화가 심화하고 있는 분석이다. 이는 취업과 더불어 청년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 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정책과 더불어 시민들 스스로 주택에 관한 아이디어로 시작하여 내 집 장만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가는 사례가 있어서 취재하였다.

청년 주택 사업 비교

자료 : 사회투자지원재단

정부 주도 유사 사업		'터무늬 있는 집' 시민출자기금 사업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기금과 특정 기업의 사회공헌 기금 등을 매칭	재원	시민출자금 (약정 기간 이후 원금 상환)
일정 소득 이하를 버는 청년 개인 연령, 신분 등을 제한한 청년층	입주 대상	지역사회 정착이나 공동 주거에 관심 있는 청년들
기금 제공자나 주택 공급자가 정한 자격 기준에 따라 입주자 선정	입주자 선발	지역의 관련 네트워크와 단체가 추천해 심사
공급자가 정한 주택	주택 형태	청년들이 직접 정한 주택
보증금 평균 300만~1천만원 월세 평균 15만~60만원 (통상 시세의 80% 수준)	자부담	보증금 없음 사용료로 보증금의 4% 청년들 공동 분담 (통상 시세의 50% 수준)

현재 정부에서 각종 시, 자체별로 다양한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주택 관련 사업들이 있다. 하지만 대상이나 선발 과정이 까다로워 혜택을 받기 어렵거나 일정 부분 자부담이 필요한 만큼 청년들에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터무늬 있는 집의 경우 “내 집 마련이 어렵다면 우리의 집을 만들자”라는 취지로 시작된 사업이다.

대학생, 사회초년생으로 새로운 지역에서 살다 보면 일로써 알게 된 사람들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운데 이러한 문제점 및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때 서로 도와줄 수 있고 나아가 지역 사회와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평가이다. 이미 1호 강북구 번동 2호 경기도 부천 3호 강북구 번동 LH 사회적 주택까지 갈수록 높아지는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터무늬 없는 집은 시민 출자 기금으로만 이루어지는데 100만 원부터 자유롭게 낼 수 있고, 전세 보증금의 용도로만 쓰인다. 출자자는 약정 기간(2년, 3년, 5년)과 이자율(무이자)을 선택한다. 이자를 안 받겠다고 하면 연 1 이자에 해당하는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약정 기간이 끝나면 바로 다음 날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다.

이러한 운영방식으로 지난 열 달 동안 사회투자지원재단의 시민 출자 청년 주택 ‘터 무늬 있는 집’에 모인 돈은 1억9300만 원이다. 개인 35명, 단체 6곳이 참여하였고 주로 SNS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보고 출자하였다. 출자자 중에는 개인으로는 주부, 회사원, 종교인 등 다양하며 연령은 40~ 50대가 가장 많고 100만~1천만원 정도를 출자했다. 터무늬 있는 집 출자자 대부분은 자신을 드러내길 부담스러워한다. 이영림 터무늬 제작 소 팀장은 “출자자들께 출자 후기를 요청하면 하나같이 크지 않은 금액을 기부도 아닌 출자인데 드러내기 부끄럽다며 손사래를 친다.”고 전했다.

몇몇분의 출자 후기로는 ‘독립을 앞둔 20대 자녀를 둔 부모로 내 자식 같아서’ ‘선배 세대가 갖는 책임감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사회의 변화가 일어날 거라 믿기에’ ‘ 청년의 꿈을 위해서’ 등이다. 삶의 시작점인 집이 집값의 상승으로 여유롭지 못한 생활 공간으로 줄어들어 집은 잠만 자는 공간이다라는 인식에서 삶이 시작하는 공간으로의 변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2019. 9. 18.

여의도연구원 대학생기자단 이현종

주거난(住居難)에 죽어난 대학생 주거빈곤의 현주소

대학생, 취업 준비생, 그리고 사회초년생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청년 세대는 열악한 고용 여건과 주택 가격 및 월세 부담으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취업난과 더불어 소득에 비해 턱없이 높은 집값이 청년 세대를 새로운 주거 빈곤층으로 전락시키고 만 것이다.

집이 아닌 짐을 이고 살아가는 이들의 차가운 현실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있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며, 특히 고정 소득이 없는 대다수의 대학생에겐 더욱 혹독한 현실이다. 이에 『대학신문』은 대학생들의 주거 실태를 중심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대한민국 청년 주거빈곤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주거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봤다.

도시 밑이 어둡다? 빛나는 도시, 어두운 대학생들

통계청의 '2015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청년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비율은 11.3%이며, 특히 서울은 그 비율이 17.6%에 이른다. 최저주거기준엔 포함되지 않지만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돼 있는 청년 주거빈곤가구*의 비율 역시 전국 17.6%, 서울은 29.6%에 달해 청년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주거빈곤율이 해마다 감소하는 가운데 청년 세대의 주거빈곤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사실은 이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반증이다.

이들 청년가구 중 특히 대학생은 고정소득이 없고 상대적으로 학업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이 더욱 크다.

오동훈 교수(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는 "청년층의 RIR* 수치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대학생 1인가구의 RIR 수치는 30%를 웃도는 등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오동훈 교수는 "공공영역에서 이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학생을 위한 정부 정책은 실효성이 높지 않다. 서울 소재 주요 대학가 주택시장이 월세임대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비좁고 열악한 원룸의 가격이 강남의 고가 오피스텔 가격을 웃도는 가격역전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마땅히 갈 곳 없는 학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임대 보증금과 월세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학업에 힘을 쏟아야 할 시간에 한두 평 남짓한 방 한 칸을 위해 전전 긍긍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생 주거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코티에이블' 안혜린 대표는 "대학생 주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대학가 인근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서울대가 위치한 관악구는 서울시 최대의 1인 가구 밀집 지역이자 42.7%에 달하는 가장 높은 최저 주거기준 미달 청년 가구 비율을 보이는 지역이다.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 10명 중 4명이 열악한 출발선에 서 있는 것이다. 중앙대·숭실대·총신대 등이 위치한 동작구, 고려대 등이 위치한 성북구가 그 뒤를 잇는다. 다수 대학이 번화한 도시에 위치해 학생들은 도심을 쉽게 떠나지 못한 채 불편함과 싸우며 살아간다. 가장 화려한 도시에 살면서도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대학생들. 이들을 위해 대학은 대체 무엇을 하고있는 걸까.

기숙사 문 열기, 하늘의 별 따기?

대학 기숙사는 장거리 통학생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안정적인 주거 공간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원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따르면 대학 기숙사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교육기본시설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시설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수용 규모나 비용에 대한 규정 역시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대학마다 기숙사 수용률이 천차만별이며, 2017년 현재 전국 4년제 일반대학의 평균 수용률은 21.0%, 수도권 지역의 수용률은 16.1%에 그친다. 심지어 수도권 70여 개 대학 중에서 기숙사 수용률이 10% 미만인 곳도 14곳에 달한다.

이처럼 수용 인원이 적다 보니 기숙사에 입주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로, 기숙사 입주 자격을 지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도 많다. 강서구에 거주하는 박재성 씨(수리과학부·15)는 "통학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입주 가능 지역이 아니어서 기숙사 입주 신청을 할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실질적인 교통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만을 기준으로 입주 자격을 제한하는 건 불합리한 것 같다."며 기숙사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요구에 일부 대학들은 기숙사 확충에 나섰지만, 번번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대학 기숙사는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되는데, 이를 세우기 위해선 시의원과 공무원,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심의가 온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경우 통과되기 어렵다. 대학가 인근의 임대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대학 기숙사가 확충되면 대학가 인근 자취방의 수요가 줄어 원룸 임대료가 낮아질 것을 우려해 강하게 반발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려대는 기숙사 수용률이 10.3%에 불과해 학생들의 불만이 높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근 개운산 부지에 1,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기숙사 신축을 발표했지만 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인근 임대업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4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김태구 고려대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첫 단계는 기숙사 신축”이라며 “기숙사에 많은 학생이 거주할 수 있게 되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면서 기숙사가 지역과 학교, 학생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양대 역시 기숙사 수용률이 12.5%에 불과함에도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기숙사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근 주민들이 ‘한양대 기숙사 반대 대책위원회’를 꾸려 적극적으로 기숙사 신축을 저지한 탓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임대업자의 입김에 밀려 기숙사 관련 정책 추진에 소극적인 것이 대학생 주거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청년주거의 안정화를 위한 협동조합 ‘민달팽이유니온’의 조현준 사무처장은 “기숙사 신축 승인 권한을 가진 기초자치단체가 학생들보단 지역 임대업자들을 우선시하는 것이 문제”라며 “대학이 기숙사를 학생들의 안정적 학업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심의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그는 “기숙사를 확충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각자의 목소리가 난무하는 이익의 각축장에서 지역주민과 학생이 손을 맞잡고 상생의 길을 도모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대학은 학생들의 주거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기숙사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성수 교수(건국대 부동산학과) 역시 “정부와 대학이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인식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대학 기숙사 건축과 동시에 주변 환경을 개선해 지역 주민들의 재산 가치를 최대한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숙사 확충을 둘러싼 갈등이 개인 혹은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문제인 만큼 다양한 입장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는 돈은 많은데, 오는 방은?

기숙사에 입주하지 못한 학생들은 인근 대학가에 짐을 풀 수밖에 없다. 이들은 한두 평 남짓한 좁고 열악한 방에 걸맞지 않는 높은 보증금과 임대료에도 별다른 수 없이 살아가며, 때론 임대업자의 횡포에 그대로 노출되기도 한다.

서울시의 '2017 주택임대차 월세계약 조사'에 따르면 동작구, 마포구, 용산구와 관악구 등 대학가가 주로 위치한 지역의 청년층 월세액은 3.3㎡ 당 1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강남 오피스텔의 평균 월세와 맞먹는 수준이다. 조현준 사무처장은 "90년대 후반 이후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관련 주택 정책이 부재했다"며 "대학가 인근을 비롯한 전반적인 원룸 수요에 비해 1인 가구에 적합한 주택 공급이 부족해 이같은 가격 역전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렇다 보니 대학생들의 지출 중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높을 수밖에 없고, 이는 대학생들의 생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오동훈 교수는 "대학생은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어려운 데 반해 주거비 부담은 높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금융 및 소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용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대학생의 월 평균 수입은 약 5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가 인근의 평균 월세를 제하고 나면 한달을 버티기엔 한참 부족한 금액이다. 실제로 대학 인근에선 높은 임대료로 인해 주거 부담과 학업 부담을 동시에 떠안고 사는 이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신림동은 서울시에서 임대료가 비교적 낮은 지역에 속하지만, 이마저도 고정 소득이 없는 대학생들에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신림동 녹두거리에 거주하는 최지원 씨(심리학과·17)는 "과외로 버는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월세가 차지한다."며 "일반적인 대학생의 소득수준에 비해 보증금과 월세가 너무 높아 부담스럽다."고 전했다.

고성수 교수는 "최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높아짐과 동시에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이 진행되면서 임대시장의 공급이 축소됐다"며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공급이 줄어들어 전반적인 임대시장의 임대료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의

가격이 전체적으로 높아지면서 대학가 인근의 임대주택의 가격 역시 오름세를 보이게 됐고, 이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대학생들이 떠안게 됐다는 것이다.

과도하게 높은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대학생들은 낙후된 시설로 인한 피해나 집주인과의 갈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대학가 인근의 주택가엔 언뜻 보아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방들이 빽빽이 늘어서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최지원 씨는 “마치 닭을 사육하는 닭장과 같다”며 대학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꼬집었다. 이어 그는 “층간 소음에 잠을 설치기도 했지만, 집주인은 구조적인 문제라며 방관하고 있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계약으로 인한 집주인과의 갈등 역시 주요한 문제다. 이 모 씨(경희대 한의학과·15)는 “재계약 기간이 지나고 나서 집주인이 갑작스럽게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했다”며 “분명 이는 계약위반 행위지만 보증금 인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집을 비워야 한다고 해 별다른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대학가 인근인 탓에 수요가 풍부하다 보니 임대업자들의 횡포가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한술 밥에 그들은 여전히 배고프다.

현재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주거난은 이후의 생애주기와도 연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오동훈 교수는 “주거문제는 전 생애에 걸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초년기의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후의 삶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며 “정부 차원에서 대학생에서 시작해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에 이르는 청년 세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부는 생애단계와 소득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18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학생은 ‘행복주택’과 ‘LH 대학생전세임대주택’ 등의 공공임대주택 혹은 ‘행복기숙사’ 등의 공공기숙사를 제공받거나, ‘청년 우대 청약’ 등의 금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현준 사무처장은 “청년이 주거복지의 주요한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면서도 “대상 주택이 필요한 가구에 적절히 공급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이들 정책은 시행 과정에서 많은 한계를 드러냈다. 행복주택은 만 20세에서 39세 사이의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시세의 70% 이내의 낮

은 가격으로 공급된다. 그러나 아직 공급량이 부족해 지난 세입자 신청에서 평균 8.9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이는 등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오동훈 교수는 “아직은 공급 물량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전까진 4인 가구가 중심이었지만 현재는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주택 공급이 증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현준 사무처장 역시 “정책 대상자로서의 대학생은 여전히 수혜비중이 턱없이 낮다.”며 “공공영역에서 공급 물량을 크게 확대하기엔 재원의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임대주택의 확충과 동시에 저가 민간 임대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H 대학생전세임대주택은 선정된 입주 대상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선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방식의 임대주택이다. 임대주택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전세액의 일정 부분도 지원해주기 때문에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조현준 사무처장은 “학생이 직접 조건에 해당하는 집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전세 물량 자체가 많지 않아 집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전세 대출의 대상 매물 조건이 까다롭고, 조건에 해당하는 매물을 찾는 전 과정을 온전히 학생 스스로 진행해야 하다 보니 적합한 방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후의 계약 절차 역시 복잡하고 까다로워 상당수의 중개인들과 임대업자들이 전세대출을 꺼리기도 한다. 조현준 사무처장은 “재임대 과정에서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점을 악용해 일부 임대업자들이 전세임대주택의 전세금을 높여 주변의 전세 시세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9. 9. 16.

여의도연구원 대학생기자단 성창헌

강원도 삼척에 청년을 위한 정책은 없다

- 강원도 삼척의 청년거주정책

청년들의 대학교 생활에 있어서 주거, 거주 문제는 등록금과 함께 가장 큰 골칫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기숙사에 합격하여 지내는 학생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월세로 집을 구한다.

서울에서는 행복주택이나 저소득 가구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어떨까. 현재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강원도 삼척시이다.

삼척시는 강원도에 위치한 크지 않은 도시로 현재 관광 도시로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원래는 필자도 서울시 서대문구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학교 때문에 삼척에 와서 살게 되었다. 삼척에는 국립 강원대학교의 삼척캠퍼스가 위치하고 있다.

삼척시에서는 청년들을 위해 어떤 주거 정책을 펼치고 있을까. 필자가 처음 대학교에 입학할 당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던 학생회장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는 학생들께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삼척으로 옮기시면 1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당시 필자는 거주지 이전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의외로 10만원 때문에 주민등록상 거주지 이전을 결심하는 친구들이 많았다.

사실 삼척시에는 청소년과 어린이를 제외하고 나면 상주하는 청년들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규모 있는 다른 도시들도 청년이 부족해서 안달인데 규모가 작은 삼척은 오죽할까. 결론적으로 현재 삼척에서 진행하는 청년들을 위한 거주정책은 아쉽게도 10만원 지원이 전부이다. 다른 거주정책이 있더라도 청년들은 직접 동사무소나 시청에 문의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다.

지자체의 입장도 이해가 간다. 얼마 되지 않는 예산으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펴기도 힘들다.

그러나 청년들을 조금 더 생각한다면 그냥 10만원 지급하고 끝내는 그런 단순한 정책보다는 아르바이트를 알아봐 준다든지, 보증금 감면 제도와 같은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정책을 편다면 추후 더 매력적인 제도와 방식으로 여러 청년들이 삼척을 더 매력적인 도시로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2019. 9. 18.

여의도연구원 대학생기자단 나찬솔

3 Round : 교육

"자사고 폐지,
본인의 주변에서는
어떤 반응이며,
본인의 평가는?"

"학생 중심 교육 VS 상위권 대학 진학의 관문"

- **교육의 다양성이 아닌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해서만 기능 vs 일반고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학습, 교육 기회 제공.**
- **자사고, 외고의 높은 등록금이 사회 계층을 공고히 할 수도 vs 대학 서열화로 인한 사 회적 문제를 학교에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지난달 전국 시, 도 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이하'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가 발표된 후, '자사고 폐지'를 두고 찬반양론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13일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서울 지역 자사고 8개교가 교육청이 결정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지만, 교육부 측은 기존의 '자사고, 외고 단계적 폐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사고가 학생들 사이에서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며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자사고 폐지를 반기는 반면 교육의 다양성 측면에서 자사고가 필요하다며 자사고 폐지가 부당함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그렇다면 과연 실제 교육 현장에서 자사고와 일반고의 교육을 경험해본 대학생들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자사고, 외고를 졸 업한 2명의 대학생과 일반고를 졸업한 대학생 2명을 만나 각각의 의견을 듣고 개인적인 대안까지 제시해보았다.

A(24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 부산 센텀고(일반고) 졸업

고등학교 진학 당시 외고 자사고 진학을 희망했지만 높은 학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포기했다. 이처럼 일반고보다 상대적으로 대학 진학에 유리한 자사고, 외고를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학생 개인의 학구열과 학업 능력 외에 높은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가정의 경제적 형 편까지 요구된다는 점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결국 학업에 대한 충분한 재능과 열정이 있어도 자사고, 외고의 비싼 학비를 감당할 수 없는 학생은 일반고에 진학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일반고에 진학한다고 해서 명문대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 하지만 같은 능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자사고, 외고 학생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나.

결국 일정한 경제적 수준이 되는 가정의 학생들만 자사고, 외고에 진학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사고가 우리 사회에서 부의 세습을 고착화하는 수단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B(24 성균관대 교육학과)씨 - 서울 영덕외고 졸업

자사고, 외고가 높은 등록금으로 인해 계층 간 교육 차별을 심화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입학 비율을 높이거나 등록금을 인하하는 등 자사고, 외고 폐지 외의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각 지역에 고루 분포된 자사고, 외고를 폐지하게 되면 더 나은 학군과 교육을 위해 서울 혹은 강남 3구와 같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 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는 지역 격차와 더 큰 교육 기회의 제한을 야기 할 것이다.

현재 사회 구조에서 우리나라의 학생과 학부모는 대학 진학에 큰 관심과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은 대학 서열화와 학벌주의의 문제이지, 그 화살을 다양성을 추구하고 학생 개개인 의 수준이나 흥미에 맞춘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자사고와 외고에 돌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C(26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씨 - 서울 구일고(일반고) 졸업

현재 자사고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가지고 다양한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초기의 목적과는 달리, 학생들의 더 나은 대입 실적을 위한 수단으로써 기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진학 시 자사고, 외고 진학을 고려했었는데, 당시 진학하고 싶었던 이유는 자사고, 외고를 진학하면 상위권 대학 합격의 가능성이 더 클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나만의 생각이 아니였고 주변 친구들의 생각 역시 비슷했다.

외고를 졸업한 한 대학 동기는 고교 시절 대학 진학을 위해 학교에서 배우는 외국어 수업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포기'하고 수능에 집중했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현재 자사고, 외고의 교육은 기존의 설립 취지와는 달리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한 것으로 변질됐다는 생각이다.

D(24 성균관대 교육학과)씨 - 서울 명덕외고 졸업

자사고나 외고가 본래 설립 취지와 어긋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의문이 든다.

명문대 진학이 내가 외고로 진학한 이유는 아니었다. 내가 고등학교 진학을 결정할 당시 외고에 진학한 이유는 학교 교육을 통해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영어 이외의 언어를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는 사교육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전무하다. 따라서 다양한 언어에 관심이 있거나 이를 발판으로 더 넓은 세계로 나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 외고 진학은 사교육 없이 외국어를 교육받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외고에서 수능이나 대학 진학보다 외국어 습득에 집중하는 학생들도 많이 봤다. 그렇게 습득한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찾은 친구들도 많았다.

무엇보다 자사고와 괴고는 그 설립 목적에 맞게 교육 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학생들이 원 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은 맹목적인 대학 진학과는 거리가 멀다. 모의고사나 수능 고득점을 위해서는 주입식 교육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일반고에서는 문제 풀이식의 수업을 주로 하지만, 자사고 및 외고는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갖춘 만큼 다양한 수업 방식의 시도가 가능하다.

외고의 외국어 수업을 예로 들면, 우선 외국어를 배우는 시수가 많다. 또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수업보다는 원어민 교사와 학생이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하며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수업도 많다.

이처럼 외고의 수업은 일반고에 비해 학생과 교사가 수업을 통해 학생에게 맞는 교육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토대가 갖춰져 있는데, 오히려 자사고, 외고 폐지로 인해서 일반고 중심의 획일화된 공교육이 확대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

필자의 제언

이처럼 자사고, 외고를 경험한 현재 대학생들에게서도 입장의 차이가 다양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자사고 외고의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상위권 대학의 관문이 아닌 본연의 역할을 다 해줄 때에 존재의 가치가 있

을 것이며 일반고 또한 자사고에서의 교육 도전에서 성공사례들을 뽑아 계속해서 발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지원으로 자사고, 외고의 직한에 어려움을 격는 학생들이 없도록 등록금 인하, 장학금 혜택 같은 기회들이 많아져야 할 것이다.

각자의 역할과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수행해간다면 보다 좋은 고등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19. 9. 27.

여의도연구원 대학생기자단 이현종

자사고 폐지? 정답을 찾자!

- 자사고 교육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한 것으로 변질됐다.
- 일반고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학습·교육 기회 제공.
- 자사고의 높은 등록금이 사회 계층을 공고히 할 수도 있다.
- 대학 서열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학교에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라 불리는 국정과제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의하여 발전되었다. 개정 등 관계법령 제개정에 의거하여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과정, 학사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학교별로 다양하고 개성있는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이다. 모집구분은 전기이기 때문에 특수목적고등학교와 같은 전기고등학교(前期高等學校)와는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다. 입학 전형은 대체적으로 중학교 내신성적을 일부 반영한 추첨 방식과 필기고사를 제외한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나뉘며, 2010년 12월 기준 50개교가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되었다.기존의 자립형 사립고보다 학교의 자율성을 더 확대, 발전시킨 것이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의무적으로 모집인원의 20%를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선발하여야 하며, 재단은 법인전입금을 도 소재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3% 이상, 특별시·광역시 소재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5% 이상 출원해야 한다. 경기도에서만 예외적으로 광역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인전입금 5% 이상 출원하여야 한다. 선발은 광역단위 모집이 원칙이나, 법인전입금을 20% 이상 출원하면, 전국단위 모집이 가능하다.

또한, 경상남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된 학교가 없기 때문에 이 지역 학생들은 전국 자율형 사립고 어디에든 지원할 수 있다. 지나친 입시 위주 교육과 상위권 학생 독식 현상으로 인해 고교서열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자사고에 대한 교육부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자사고 학교법인은 입학금과 수업료의 3% 또는 5% 이상 금액을 매년 학교로 전입해야 하지만, 서울지역 27개 중 4개 학교는 재단전입금을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원래 영미권의 사립학교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기본이나, 한국의 경우에는 재정적 문제로 인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공립학교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교육당국의 개입을 받으면서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립학교에 영미권 사립학교처럼 자율성을 보다 많이 보장해줌과 동시에 정부에서의 재정지원

은 줄이고 학생들로부터 직접 학비를 받아 운영하도록 한 학교이다.

A(26·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씨, 서울 구일고(일반고) 졸업한 학생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현재 자사고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가지고 다양한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초기의 목적과는 달리, 학생들의 더 나은 대입 실적을 위한 수단으로써 기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진학 시 자사고/외고 진학을 고려했었는데, 당시 진학하고 싶었던 이유는 자사고와 외고가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을 누리고 싶었다기보다 자사고와 외고를 진학하면 상위권 대학 합격의 가능성이 더 클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나만의 생각이 아니었고 주변 친구들의 생각 역시 비슷했다. 외고를 졸업한 한 대학 동기는 고교 시절 대학 진학을 위해 학교에서 배우는 외국어 수업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포기'하고 수능에 집중했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현재 자사고와 외고의 교육은 기존의 설립 취지와는 달리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한 것으로 변질됐다는 생각이다."

B(24·성균관대 교육학과)씨, 서울 명덕외고 졸업한 학생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자사고나 외고가 본래 설립 취지와 어긋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의문이 든다. 명문대 진학이 내가 외고로 진학한 이유는 아니었다. 내가 고등학교 진학을 결정할 당시 외고에 진학한 이유는 학교 교육을 통해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영어 이외의 언어를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는 사교육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전무하다.

따라서 다양한 언어에 관심이 있거나 이를 발판으로 더 넓은 세계로 나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외고 진학은 사교육 없이 외국어를 교육받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외고에서 수능이나 대학 진학보다 외국어 습득에 집중하는 학생들도 많이 봤다. 그렇게 습득한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찾은 친구들도 많았다.

무엇보다 자사고와 외고는 그 설립 목적에 맞게 교육 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은 맹목적인 대학 진학과는 거리가 멀다. 모의고사나 수능 고득점을 위해서는 주입식 교육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일반고에서는

문제풀이식 수업을 주로 하지만, 자사고 및 외고는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갖춘 만큼 다양한 수업 방식의 시도가 가능하다.

외고의 외국어 수업을 예로 들면, 우선 외국어를 배우는 시수가 많다. 또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수업보다는 원어민 교사와 학생이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하며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수업도 많다.

이처럼 외고의 수업은 일반고에 비해 학생과 교사가 수업을 통해 학생에게 맞는 교육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토대가 갖춰져 있는데, 오히려 자사고?외고 폐지로 인해서 일반고 중심의 획일화된 공교육이 확대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

C(23·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씨, 대구 대건고(자사고) 졸업한 학생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자사고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모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성격인데, 자사고 진학을 통해 비슷한 꿈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었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과 잘 조성된 면학 분위기 속에 경쟁하며 나를 더 발전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반대로 일반고보다 과열된 경쟁 속에서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부작용도 있었다. 또 자사고에서 학업과 관련된 교육 이외에도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누릴 수 있었지만, 사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을 위한 스펙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대학 진학과 관련 없이 순수하게 학생의 자율적인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D(24·부산대학교 경제학과)씨, 부산 센텀고(일반고) 졸업한 학생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진학 당시 외고와 자사고 진학을 희망했지만 높은 학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포기했다. 이처럼 일반고보다 상대적으로 대학 진학에 유리한 자사고와 외고를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학생 개인의 학구열과 학업 능력 외에 높은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가정의 경제적 형편까지 요구된다는 점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결국 학업에 대한 충분한 재능과 열정이 있어도 자사고와 외고의 비싼 학비를 감당할 수 없는 학생은 일반고에 진학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일반고에 진학한다고 해서 명문대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같은 능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자사고와 외고 학생보다 일반고 학생이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나.

결국 일정한 경제적 수준이 되는 가정의 학생들만 자사고와 외고에 진학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사고가 우리 사회에서 부의 세습을 고착화하는 수단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B(24·성균관대 교육학과)씨, 서울 명덕외고 졸업한 학생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자사고와 외고가 높은 등록금으로 인해 계층 간 교육 차별을 심화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입학 비율을 높이거나 등록금을 인하하는 등 자사고와 외고 폐지 외의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각 지역에 고루 분포된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하게 되면 더 나은 학군과 교육을 위해 서울 혹은 강남 3구 같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는 지역 격차와 더 큰 교육 기회의 제한을 야기할 것이다.

현재 사회 구조에서 우리나라의 학생과 학부모는 대학 진학에 큰 관심과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대학 서열화와 학벌주의의 문제이지, 그 화살을 다양성을 추구하고 학생 개개인의 수준이나 흥미에 맞춘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자사고와 외고에 돌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자사고와 외고의 문제보다는 높은 등록금으로 사회계층의 갈등을 유발하는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일반고 수준의 등록금올 입학할 수 있는 자사고는 없다는 것이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것이 아닌가 싶다.

“개천에서 용 난다.” 표현을 자사고와 외고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 저렴한 국립자사고가 만약 존재한다면 그래도 조금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자녀를 좋은 환경의 고등학교에 보내고 싶은 마음도 충족시키고 경제적 능력을 뛰어넘어서 정말 영재들이 존재하는 현시점에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고등학교가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2019. 9. 23.

여의도연구원 대학생기자단 성창헌

자사고 폐지에 대한 찬성 및 반대

나는 인문계 고등학교 나왔다. 내가 인터뷰를 요청한 주변 지인들 역시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성적에 관심을 가지고 상위권 고등학교를 넘어, 상위권 대학교를 넘보는 학생들에게는 어느 정도에 정보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관심 밖의 일이다.
실제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이하 자사고)를 준비했지만 떨어진 친구, 희망했지만 성적으로 인해 좌절한 친구, 자사고는 들어봤지만, 자세하게 모르는 친구 등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었다.
나 역시 자사고를 준비해 본 적이 없어 많이 들어보았고, 폐지 찬성 및 반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정확히 모르는 와중에 이번 콘테스트는 나에게 큰 의미가 있다.

정XX (24) : 자사고가 설립되고 준비했지만, 정보 부족과 내신 부족으로 탈락했다고 한다. 지원 동기는 더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을 것 같았고, 부모님의 제안으로 기존의 인문계 수업과는 다른 차별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고 한다.

Q : 자사고의 설립 취지는 다양한 교육의 수요에 있는데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A :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외고, 특목고처럼 인문계 고등학교의 상위 학교라 생각되고 상위권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발판이라 생각된다. 나 역시 그런 생각으로 자사고 입학을 희망했고, 대부분 학생처럼 인문계에 진학했다가 목표 대학을 꿈 꿀수 없을 것 같아 자사고를 희망했다.

Q : 자사고 폐지에 대한 본인 생각은?

A : 반대한다. 취지가 좋은 만큼 본래 취지에 맞게 개편되었으면 좋겠다. 인문계 고등학교, 자사고, 특목고 그리고 외고 등 본인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의 고등학교로 변화하면 좋겠다.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대학교 진학이 쉽다더라, 유리하다는

등의 정보력 싸움이 아닌 제각기 다른 학생들이 자신의 장점을 찾고 뽐낼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변화하길 바란다.

이 밖의 자사고 폐지를 찬성한다는 친구는 자사고 및 많은 종류의 고등학교가 학생들에게 혼란을 가져다준다는 이유에서였다.

2019. 9. 28.

여의도연구원 대학생기자단 박승현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